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7월 18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-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

「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」

[발표 요약 포함]

- 일 시 : 2012년 7월 18일(수) 09:30~12:00
- 장 소 :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
- 주 관 : KDI · 한국재정학회

□ KDI(원장: 현오석)는 7월 18일 한국재정학회(회장: 염명배)와 공동으로 『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』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,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, 보다 바람직한 거시 정책 기조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조세 및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함.

- 남유럽 재정위기가 야기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금융 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,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의 검토와 안정적인 장기 재정 운용 방향 설정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함.
- 그러나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성장세 둔화 대응과 재정건전성 유지 간 상충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.

-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중장기 경제정책 핵심과제 검토와 재정건전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원 확보 방안 및 재정 준칙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거시 경제 정책 및 재정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.

-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과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‘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’ 및 ‘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’ 주제의 발표자로 나설 토론회는 김성태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,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,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, 백응기 상명대학교 교수,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,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,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임.

❖ 문의

- 정책토론회 내용관련 :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(02-450-3633)
- 행사참여 관련 : 한국재정학회 사무국
(02-777-0128, kapf2007@naver.com)

❖ 첨부#1. 프로그램

❖ 첨부#2. 발표 요약

❖ 첨부 #1.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
09:30 ~ 10:00	<p>개회식 사 회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· 한국재정학회 사무차장</p> <p>개회사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</p> <p>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</p>
10:00 ~ 12:00	<p>정책토론회</p> <p>사 회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· 한국재정학회 전임회장</p> <p>발 표 1.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</p> <p>발 표 2.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</p> <p>토 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백웅기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조일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</p>

❖ 첨부#2. 발표 요약

발표 1.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

고영선 KDI 연구본부장

□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.

- (원인) 유로화 도입 이후 과도한 낙관론 속에 금리 하락과 급속한 자본 유입이 진행됐으며, 내수과열, 임금상승, 공공 및 민간 부채 누적으로 대외적인 취약성이 커짐.
- (전망)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의 재정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안정화의 성공은 불확실함.

□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

- (무역경로를 통한 영향) EU의 높은 역내교역비중(65%)과 10% 선에 그치는 한국의 對 EU 수출비중을 고려했을 때, 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- (금융경로를 통한 영향) 對 한국 투자액이 큰 영국 은행권은 남유럽에 대한 익스포저(exposure, 위험노출액)가 적으므로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가 야기한 경제 침체가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,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, 우리나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□ 2012년 경제 전망과 경제 운영 방향

-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-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,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에는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재정 정책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 있음.

□ 중장기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

-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: 남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의 외곽(periphery)에 위치한 한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함.
- 거시경제 안정화: 총수요의 과도한 팽창은 반드시 파국을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, 경기과열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정 위주의 통화정책,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함.
- 경제의 미시적 유연성 제고: 경쟁적 상품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잠재성장률 제고 및 해외충격에 대한 적응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바, 경쟁정책 강화, 한계기업 퇴출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함.

발표 2.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방향

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

1. 현황

□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와 구조

- 우리나라의 낮은 사회보호 및 보건 관련 지출 규모로 GDP 대비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7%p 낮은 30%대 초반에 그침.
-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나, 규모와 적용 부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
- 1980년대 초(전두환 정부), 1980년대 말(노태우 정부), 1990년대 말(김대중 정부), 2000년대 초(노무현 정부)에 빠른 복지 지출 증가세가 나타남.

□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수준 및 구조

- 2010년 19.3%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, 멕시코, 호주, 일본 등과 함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함.
 - 2008년도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26.5%와 20.7%로, OECD 평균인 34.8%과 25.8% 보다 각각 8%p와 5%p 낮음.
-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정부별로 살펴보면, 이명박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 1~2%p 하락, 김영삼 정부 시기 소폭 상승, 노태우 정부, 김대중 정부,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1~2%p 정도 상승함.

2. 문제점 및 발생 원인

□ 재정건전성 악화

- ‘세입 내 세출’ 원칙 준수로 GDP 대비 10% 미만이었던 외환 위기 이전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,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 복지재정 확대로 30%대에 진입했으며,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35%까지 증가함.
-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, 대외개방 이후 효과성이 낮아진 금융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편이 대외 충격 극복을 위해 효과적
-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재정정책은 총수요 진작보다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됨.

□ 복지 포퓰리즘 등장

- 복지포퓰리즘은 “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사상과 활동”으로 정의할 수 있음.
-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간 관계를 살펴보면,
 -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다수의 남미와 남유럽 국가의 사례와 더불어 복지지출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한 1990년대 북구 국가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, 복지지출 확대 없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례는 없음.

- 이탈리아의 GDP 대비 복지지출액은 1995년 21%에서 2007년 25%로 4%p 증가했으며, 1995년 OECD 평균보다 낮았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복지지출액은 2007년 OECD 평균을 상회
-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'살아남은 복지국가'만을 단순 벤치마킹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, 남미 국가들과 그리스처럼 생존하지 못한 복지국가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임.
- 복지의 확대와 개선 작업은 우리 몸에 맞는 규모와 속도로,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□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

- 19%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·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, 2018년 21%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.

□ 다른 재정과 조세의 문제점들

- 조세정의 미확립,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·감면
: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비중은 너무 작을뿐더러 누진성 또한 높지 못해, 조세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.
- 일부 재정지출 항목의 높은 경직성
: 지방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.27%로 고정됨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, 초중등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
-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취약한 재정효율성 유인
- 물적투자, 제조업, 수출 지원 중심으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운영을 노동, 인적투자, 서비스업, 내수 중심으로 전환

3. 정책 방향 및 과제

□ 재정건전성 강화

- 중기적으로(5년 가량) 국가채무를 30%까지 낮추고, 장기적으로 20%대 선을 유지해야 할 것임.
-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 0%에서 -2% 사이,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경우 5% 보다는 적은 적자규모를 유지할 필요

□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복지 확대

- “빛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는 않겠다”, “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현세대의 복지를 늘리지는 않겠다”는 정책 기조를 천명
- 203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9.5%(2007년 OECD 평균)를 목표로 하는 경우, 조세부담률은 25%에 달해야 하며 이는 5년마다 1.8%p씩 상승해야 함을 의미

□ 세수 확충

-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%(1.8%p 상승)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.
- 조세부담률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부분과 인위적인 세제개편으로 높아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.
 -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는 0.7%p 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,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높여야 할 조세부담률은 1.1%p(약 12조원)임.
 -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38%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, 최고세율 적용 기준과표를 낮추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임.

-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,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점진적 축소·폐지, 기타 소득 비용공제 축소(80%에서 70%로),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소득공제제도로의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개편,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소득 축소, 자본이득 과세 대상 대주주 정의 확대, 과생상품 과세 도입, 양도소득세 강화, 간이과세제도 축소·폐지 등의 정책 노력이 필요
- 법인세의 경우 조세경쟁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율을 인상해야 하며, 중장기적으로 누진 구조의 법인세를 단일 세율로 개편*하고,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*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며, 우리나라, 미국, 일본, 벨기에 등이 예외적으로 누진 법인세를 갖고 있음.